

18대 총선 광주·전남지역 선거구 획정 어떻게 돼나

광주 +1, 전남 -1 지각변동 예고



내년 4월 9일 치러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 하한선이 무너지거나 상한선을 돌파한 광주·전남지역 일부 선거구의 축소 또는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역 의원들과 예비주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8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지역구는 대규모 지각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17대 국회 정계특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18대 국회의석수를 결정할 뒤 선거구 획정위를 가동, 인구 상하한선을 조정하고 지역구 변경에 나설 전망이다. 18대 국회 광주·전남지역 선거구 조정과 총선 구도를 전망해본다.

광주 광산구 선거구 분할 '도전의 땅' 부상 전남 13→12석 7개 지역구 경쟁 치열할 듯

▲광주지역 선거구= 현재 광주지역 지역구는 동구(1), 남구(1), 서구(2), 북구(2), 광산구(1) 등 총 7개다. 정치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의 인구 상하한선 조정 결과에 따라 광주지역 지역구의 의석수가 현행에 유지되거나 1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2개 선거구인 서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복수 지역구 하한선

(31만5천명)이 붕괴, 1개 선거구로 조정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10만3천~30만9천명으로 정하면 현행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기준을 10만4천~31만2천명으로 정하면 1개 선거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1개의 선거구인 광산구는 총인구가 1개 선거구 인구 상한선(31만5천명)을 돌파, 2월 임시국회의

인구 상하한선 획정과 관계없이 2개의 선거구로 나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서구가 1개의 선거구로 전환된다면 광주지역 최대 격전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동채 의원과 염동연 의원은 물론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 김영진 전 의원 등이 그동안 터를 닦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2개의 선거구로 조정되는 광산구는 새로운 도전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광산구에는 벌써부터 20여명의 총선 입지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지역 선거구=18대 총선에서 전남지역 선거구는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2개 선거구였던 여수시가 인구 감소로 1개의 선거구로 통합될 전망이다이며 강진·완도, 영광·함평의 인구 하한선이 무너짐에 따라 전반적인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18대 국회에서 전남지역 의석이 13개에서 12개로 1석 줄어들고 7개의 지역구가 조

조정후 선거구 예상



\*인구상하한선: 104,000 및 312,000



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담양+곡성+구례, 영광+장성, 나주+함평, 화순+장흥, 영암+강진+완도, 광양시 단일 선거구, 여수시 1개 선거구 조정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반해 신안+무안, 해남+진도, 고흥+보성, 순천시, 목포시 등 5개 지역구는 현행에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전남 지역구 조정이 현실화되면 상당히 쪼그라든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김효석 의원(장성)과 이낙연

의원(영광)은 물론 유선호 의원(영암)과 이영호 의원(완도)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1개의 선거구로 통합될 여수시를 놓고 김성곤 의원과 주승용 의원도 맞대결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구 조정의 원동기 일부는 광산구나 수도권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새로 형성된 화순+장흥, 담양+곡성+구례 지역구는 정치 신인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회고 2007

3 본격화된 다문화 시대

‘외국인 100만명 시대’ 눈앞 한국사회 지탱 ‘한 축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외국인 여성을 포함, 한국 내 외국인 100만 명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을 이방인이 아닌 한민족으로 받아들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이들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통합되고 또 새로운 정치·사회세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모습이 확인해지고 있다.

전남 농촌 총각 40% 외국인과 결혼 이방인 아닌 한민족 수용 다양한 시도

24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광주 9천900명 전남 1만4천800명을 포함해 모두 75만2천130명으로, 한국 전체인구인 4천800만 여명의 1.5%를 넘어섰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지닌 혼혈인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을 합할 경우 국내 거주 타민족 또는 외국인인 9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의 국내유입과 혼혈인 출산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타인종·외국인 100만명 시대’는 시간문제인 셈이다.

이에 따라 타인종·외국인들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남아 출신들은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근로자로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 한 가정의 아내 또는 남편으로서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00여 개 사업장에서 600여 명의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전남지역 불법체류자 4천여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5만 명 가량이 산업현장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또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도인 전남의 경우 최

근 들어 농촌 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자리 잡은 일본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 출신 외국인 여성도 지난달 말 현재 광주 2천500명, 전남 4천79명 등 광주·전남에서만 6천 579명에 이른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써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한국사회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타인종 가운데 일부는 아직까지도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차별과 갈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채완(55)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은 “단일민족이라는 신화가 깨지는 것은 아쉽고 서운하지만 외국인·혼혈인들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제는 이들이 자신을 한국인으로 규정하고, 또 한국인들도 이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새로운 국가정책과 사회모델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Bohae Yangjo advertisement featuring a man drinking and a bottle of Maechi-mul. Text includes '보해양조', 'www.bohae.co.kr', '아름다운이 남는다', and '매추'.



10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나주에 정착한 태국 출신 수파하칸(38·왼쪽에서 두 번째)씨가 지난 4일,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부모와 함께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를 둘러보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주여성수가 증가 이유로서 받아들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